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광주시 포함해야”

“관광산업 발전 위해 특급·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시의회 정례회서 김용집·정순애 시의원 주장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는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하고, 오는 17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5건, 조례안 23건, 승인안 1건, 동의안 2건, 의결청취의 건 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첫날인 ‘한빛원전의 변경 30km’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광주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 김용집 의원(민주·남구 1)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광주시가 정보 공유 및 비상대책 수립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측은 방사선 비상등급상 청색비상 상황이 아니고, 광주가 방사능방재계획상 원전반경 30km로 규정된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대고 있다”며 “한빛원전에서 35km 거리인 광주시에 150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시민안전실 내에 원전 전문 인력을 증원해 방사능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한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특급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시의회 정순애 의원(민주·서구2)은 이날 “세계수영대회 같은 메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숙소가 마땅치 않으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세계수영대회 성공 기원 슈퍼콘서트에 열려 관람객 3만여 명이 광주를 찾았을 때 극심한 교통 혼잡과 부족한 식당 등의 문제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지만, 숙박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광객 대부분이 공연만 보고 당일 광주를 떠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광주에 체류를 해야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특급호텔 부족은 대형 행사 유치 차질은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 마이스산업 육성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구 1급고 운영기관 제공모

“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정성 훼손” 법원 판결 수용

광주 광산구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논란이 일었던 1급고 운영기관을 재선정하기로 했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5585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급고 운영기관을 제공모한다. 광산구는 선정 심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1급고 운영기관을 다시 찾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급고 운영기관을 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2급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이 발생했다’며 농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 접촉을 시도한 농협 또한 1급고 지정 대상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농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광산구는 판결을 받아들여 1급고 운영기관을 제공모하기로 했다.

명단이 유출된 심의위원은 모두 해촉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심사 기준과 심의위원 숫자도 바꿀 방침이다.

2급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광주은행과의 계약은 1급고 운영기관을 확정하는 뒤 이행할 계획이다. 3년 단위로 체결한 기존 1·2급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다.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정성 훼손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운영 약정을 연장 중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선고한 1심 판결에서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성과 설명회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성과 및 계획 설명회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회원 등 350여명이 참석해 3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전남도 대상·광주시 최우수상

전남도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 전국 지자체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부문과 우수사업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 재정 인센티브 4억원을 확보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전남 동행일자리 사업’,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등 전남도가 자체 기획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들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킨 광주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 ‘최우수상’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등 정량지표와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대책 적합성·효과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6년에 이어 올해 3년 만에 대상을 차지했으며, 여수시·광양시·강진군이 최우수상, 순천시·화순군·영광군이 우수상, 나주시·고흥군이 특별상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최우수상, 서구·남구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주민의견 듣는다

광주시는 4일부터 이틀간 ‘2025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각종계획, 사업 등을 조사·발굴하고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옛 국군통합병원, 전남일신방직 주변 등 17곳을 지정한 바 있다. 공청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5곳(송정역·광주역·송암·본촌·소촌·산단) ▲재개발 해체 지역 2곳(중창2구역·동명 1구역) ▲전통시장 주변 8곳(대인·산수·무등·말바우·송정시장 등) 등 51곳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생사업 확정내용을 공고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갑을’ 관계 개선·1회용품 사용 자제 조례안 눈길

전남도의의회 정례회... ‘의원 공무국의 활동 조례’ 개정

전남도의의회가 수직적 ‘갑을’ 관계 개선 및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등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 332회 정례회 기간 중 모두 25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1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김기성(민주·담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전경선(민주·목포5) 의원이 발의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갑’과 ‘을’이란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남도 산하 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게 된다.

도의회는 또 ‘의원 공무국의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외의성 국의 출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국의 출장 심사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

의 2로 확대하는 한편, 사전에 2시간 이상의 학습을 이행하도록 했으며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모자보건 조례안’(차영수 의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원 의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의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남도의의회는 또 회기 기간 한전공대 설립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10개 지자체 ‘남도 명품길’ 공모 신청

3곳 선정 예정

전남지역 10개 지자체단체가 ‘남도 명품길’을 조성하겠다고 공모에 뛰어들었고 고흥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우주발사전망대-팔영대교까지 8km에 이르는 ‘미르 마루길’을 남도명품길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남도명품길’ 발굴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10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는 금오도 비렁길(18.5km)을 명품길로 꾸미겠다고 공모에 나섰고 광양은 삼전강 휴게소-배알도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윤동주 문학길’(13.4km)로 남도명품길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냈다.

담양군은 분통마을-담양호 제방까지 12.1km 구간을 신설, ‘담양호 수변길’을 조성하겠다고 공모에 뛰어들었고 고흥은 남열해돋이해수욕장-우주발사전망대-팔영대교까지 8km에 이르는 ‘미르 마루길’을 남도명품길 후보지로 신청했다.

장흥도 장흥담 물문화관-사인정에 이르는 탐진강 정자 도널길(19.2km)를 남도명품길로 가꾸겠다고 신청했고 해남(망골희망길), 무안(해안관광도레길), 함평(함평 생태 숲길), 영광(백수 노을 감상길), 진도(삼별초와 함께 걷는 윤림 명승길) 등도 신청서를 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